

이재명 “참사 정부 책임”... 유종성 교수 “野, 오버 안해야”

토론회서 참사 관련 정부 책임 강조 박찬대 “유족 관심, 진상·원인 규명” 일부 의원 퇴진 집회 참석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이태원 참사 관련 토론회에서 “후진국형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16일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정부 차원의 담당 책임자가 할 부분이 있다”며 “경찰의 기본적 소임만 다했다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도 문제지만, 국제적 위신을 손상한 어처구니없는 대참사”라며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은 우리 정치권 주요 과제가 됐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앞으로 있게 될 특검을 통해 철저한 원인 분석, 원인 규명, 상응하는 책임 부여가 돼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국민 안전을 쟁여야 하는 정부 차원의 당장 책임 질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희생자 가족들과의 면담을 기억하면서 “그 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참사 진상이 뭘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유족으로서 슬픔을 이겨내기 급급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며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공동체가 참사를 피하고 원인을 규명할 건지 진지하게 토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재난관리 시스템상 어느 지점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 대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 원인이 뭘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안다”고 했다.

또 “세계에서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대한민국이 정권 교체 불과 6개월 만에 안전한 국가에서 후진국가로 전락했다”며 “참사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일선 실무자가 아닌 진짜 책임자를 밝혀내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협조, 동참 않는다면 단독으로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참사 발생 배경에 대한 평가와 분석, 진상 규명 필요성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또 참사 관련 논의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경계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벌써 정권 퇴진 운동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정쟁, 정치적으로 몰고 간단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과 촛불하는 분들이 오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정쟁화로 가는 것을 조심하고 사회적 재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내는 진지한 고심을 하게 되면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부 책임이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참사를 보고 정권 퇴진으로 가는 건 지나치다는 것”, “너무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나가는 건 오버액션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 오버하는 쪽이 정쟁 당사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책임을 추궁할 건 하면서도 한편으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적, 사회적 참사에 대해 정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안다”면서도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분명하게 얘기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 언급을 했다.

아울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국민 슬픔을 활용하거나 이용한다고 비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尹 대통령 내외,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4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 환영 행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내려 이상

민 장관과 악수하며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환송 행사에서도 이 장관의 왼쪽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격려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한 G20 정상회의의 첫 날 일정을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서선욱기자

안철수 “윤희근 해임·이상민 사퇴해야 尹 정부에 도움”

“민심에 따라 움직여야 정부 힘들어지지 않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해임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진행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 후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주관 정책포럼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성공에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는가 생각하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는 수사권이 경찰에 없고 경찰에 있지 않나”며 “참사 초기부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경찰청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현재 당의 친윤과 결이 다르니 저를 비유으로 분류하시는 분들이 있

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라며 “민심을 제대로 전달 받아 민심에 따라 움직여야 정권이 힘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담당 주무부처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 생각”이라며 “당의 역할을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 추진 중인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선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건 진실규명이 아닌 정쟁의 장을 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증인을 부르면 증인이 수사 중이라서 출석 거부 가능성이 높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합의를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이 30%대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 대해선 “비당원 우호층이 떠나면서 30%밖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0.73% 포인트 차 승리가 국민의힘 당원뿐 아니라 비당원 우호층들이 합세했기 때문”이라며 “떨어져 나간 중도층에 대해 어떻게 하면 다음 총선 때 다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해야 하는 일은 민심을 정확히 용산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일은 행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그 방향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을 때는 정확히 지적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서 하려는 일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일만 해서는 진짜 여당이 아니다”라며 “두 가지 일을 제대로 잘 할 때 여당의 역할이고 그게 대한민국 삼권분립 정신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